

교섭 40분 만에 결렬... 업무개시명령 가처분 신청 '맞불'

정부-화물연대 2차 협상

정부 "명분별기용 만남 의미 없어" 화물연대 "정부, 대화의지 없어" 업무개시명령에 기본권 침해 반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 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되면서 정부의 압박이 본격 시작됐다. 화물연대 측은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집행정지하고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 거부 7일차에 접어든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면담 시작 40분 만에 결렬돼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제도화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에 나선 뒤 기자들을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 시간을 끄는 식의 명분 별기용 형식적 만남은 의미 없다"고 밝혔다. 면담 이후 화물연대 측은 "윤석



구현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등 정부 측과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등 화물연대 측이 지난달 30일 2차 교섭을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주 앉아 있다. /뉴시스

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멘트 화물차 기사 300명에 명령서 송달... "즉시 업무복귀" 압박

정부는 2차 면담이 성과없이 종료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반면, 화물연대 측은 명령서 송달을 회피하거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대응하고 있어 추가적인 협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직후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이날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 2500여명의 약 15% 수준인 300여명에 대해 명령서를 송달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시팀을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사로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여 운송 거부자를 추가로 파악해 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명령서 송달 인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에선 화물차주가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는지 여부나 업무를 하지 않는 이유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화물차주 주소나 연락처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이 명령서 송달 자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

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어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엔 파업 참여자들이 휴대 전화를 꺼놓아 유선을 이용한 명령서 송달이 어려웠었다.

국토부는 우선 화물차 기사 본인이나 가족에게 우편으로 등기를 전달하고, 등기 전달이 힘들 경우 공시 송달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보통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 상황이어서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할 방침이다.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 기사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건강, 학업, 이직, 가족 사망 등이며, 이번 처럼 특정 제도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 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운송 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명령서 수령을 가급적 회피하고,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지난달 30일 인천시 중구 인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정부의 탄압에 맞선 더 힘찬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대응 강도를 높여갈 것임을 시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치적 파업” vs “인력감축 철회” 대립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노조 대규모 총파업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곳곳 혼란 강대강 대치에 장기화 가능성 커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서울시의 인력 구조조정 계획에 반기를 들며 지난달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를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 노조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가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을 총집결해 평시 인력 대비 83% 수준인 1만3000여명을 확보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면서 이날 오전 출근길 대란은 피했다. 하지만 공사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이 길어지면 출·퇴근길 교통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춧불집회 이후 저희 조합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집회가 없었다. 함께 싸워 승리하자!"

지난달 30일 오전 10시50분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청 서측에서 5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노동조건 개선! 안전인력 충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몸피를 메고, '인력감축 철회하고 노사정 합의 이행하라'는 글이 적힌 파란색 피켓을 든 공사 노조원들이 이날 오전 서울 시청역 4번출구 앞에서부터 대한문 건너편 서울광장까지를 가득 메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을 충원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것을 뒤집었다.

(노조)

이 정권은, 서울시, 노동자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인 채로 오로지 공공기관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5월 승무원 증원을 약속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긴축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인건비 지출을 줄이라고 지시하자 오 시장이 이에 발맞춰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어 무산됐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됐다면 구의역 급근 사고도, 신당역 사고도, 이태원 참사도 막을 수 있었다.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하나"면서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면 사과하고 노동자들의 인력을 충원하고 현장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책임은 뒤로한 채로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용자 측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정원의 약 10%에 달하는 1539명을 줄이려 하는 것에 반발해 이번 총파업을 벌였다. 공사 노조는 서울시의 이 같은 인력 감축안을 2인 승무를 1인 승무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업무를 자회사로 넘기거나 외주화하고, 근무제도를 개악해 노동강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쥐어짜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는 신자유주의 공격이라는 것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장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우리 서울교통공사 조합원들을 총파업으로 내몰았다"며 "신당역 참사, 이태원 참사, 오봉역 참사... 언제까지 우리가, 시민이 이렇게 죽어가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공사 노조 파업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묻는 말에 "이번 파업의 경우 저는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싶다"면서 "사실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구조조정 철회, 혁신 안 철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그 배경으로는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실제로 이번 (노사) 협상 결렬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면서 "서울시민의 출퇴근길, 서울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아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노총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이 그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서울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시작된 서울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시민들은 "누구나 노동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 싸울 수 있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인원을 더 감축시킨다는 건 노동자의 고크를 빼먹으면서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건데 말도 안 된다", "지하철 파업이어서 30분 일찍 나왔는데 바로 와서 당황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정 기자 hki@

주유소 곳곳 휘발유 품질... 기름대란 우려

품질 주유소 서울 15곳 등 전국 23곳 이창양 "품질 현황 등 실시간 파악 필요시 정유도 업무개시명령 강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7일차에 접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유가 품질되는 상황이 늘고 있다. 정부는 긴급 수송체계 가동 현황 점검에 나섰다. 필요시 시멘트 분야와 함께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이수역 인근 휘발유 품질 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영향을 살피고 긴급수송체계 가동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8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품질 주유소는 총 23개소(휘발유 22개소, 경유 1개소)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 3개소, 인천 2개소, 충남 3개소다.

이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석유제품 유통 차질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의 경제적 피해와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즉시 '정유업계 비상상황반' (반장 자원산업정책국장)을 구성·운영 중이다. 비상상황반은 정유 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차질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유사간 협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면서 석유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에 휘발유 품질 표시가 돼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유조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휘발유가 품질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뉴시스

제품 수송차질이 점차 심화될 상황에 대비해 군용 탱크로리 5대, 수협 보유 탱크로리 13대를 내달 1일부터 긴급 투입해 운영할 예정이며, 추가 대체수송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품질 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 중"이라며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필요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